

광주시·전남도 日오염수 방류 '보여주기식 대응'

방류 앞두고 방사능 검사항목만 늘려... 분석기계는 달랑 2대뿐 전문인력도 태부족...삼중수소까지 잡아내는 검사방법 확대 필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응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사능검사를 하기 보다 단순히 검사 대상 품목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고정돼 있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늘리기보다는 검사 대상만 늘리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계획'으로 방사능 검사대상 품목을 기존 400개에서 4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10개를 더 늘려 총 420개를 검사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검사 대상은 유통식품(광주시 5개 차지구 유통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150개)과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130개), 학교급식 식재료(가공식품, 농·수산물 80개)와 로컬푸드(40개) 등 4개 항목이다.

확대되는 검사대상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80개였던 검사대상이 올해 90개로 늘고 내년에는 100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로컬푸드 검사대상을 줄이고(40개→20개) 도매시장 수산물 검사대상을 20개 늘리기로 했다. 전남도도 검사 대상을 올해 90개에서 내년 270개로 늘리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방사능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산하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맡기고 있다.

문제는 검사대상만 늘렸을 뿐이라는 데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기계는 각각 2대뿐이다.

한가지 품목을 검사하는데 1건당 1만초(약 3시간)가 소요되지만, 검사장비는 늘리지 않고 검사대상만 늘려 실질적으로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주기만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대상만 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불안감을 줄이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식약처에서 수산물 비중을 늘리고 전체 검사 건수는 줄이는 방식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건당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목표 건수의 상향 조정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 역시 "의뢰를 맡길 때 수산물을 직접 구매해야 하고 검사 비용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180건 가량 늘어난 것은 큰 변화"라는 입장이다.

방사능검사 전담 연구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취급 허가를 받거나 전문 지식을 갖고 검사하는 것이 아닌 '업무 분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현재 광주·전남은 영광군에 한빛원전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까지 더해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연구원 내 전문성을 키우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 자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닌 물질 내부에 있는 방사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사 방법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감마핵종 분석(요오드, 세슘) 방식의 검사를 하고 있다.

감마핵종 검사는 방사능 사고 지역이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사능을 쉽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플루토늄,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은 알파-베타 핵종 검사로 하는데 감마핵종 검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정운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샘플링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갖는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대상이 늘어났다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재는 생활 속 방사선 위험을 우려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저준위 폐기물(방사능 단계가 낮은 폐기물)의 방사능 수치까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마핵종 뿐 아니라 베타핵종(삼중수소)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북구 5급 이상 MBTI 검사한 까닭은?

저연차 공무원들 아이디어 수용 소통 위해...행정시스템에 게재

광주시 북구가 5급 간부 이상 공무원들의 MBTI 검사 프로젝트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17일 "구청 내 저연차 공무원들과 간부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MBTI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MBTI는 16가지 유형에 따라 인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외향형,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프로젝트는 북구청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제29기 청년간부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저연차(8-9급) 공무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연차 공무원들은 MBTI 검사 결과를 통해 상사의 특성을 알고, 행동의 원인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사회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청년간부회의 임원들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찾아가 MBTI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받는다.

단 해당 검사는 자율적 참여 의사를 반영하고 있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결과는 북구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시스템 '새울'에 게재되며 구청 내 공무원 모두에게 공유된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5급 이상 간부 MBTI 검사를 통해 구청 내 공무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땡큐! 한국전 영웅들 17일 오후 광주시 남구 대성여고 강당에서 열린 호국 보훈문화제 'Thanks for heroes'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보훈 유공자들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봉선동 건설현장 숨진 유족에 건설사 사과문

추모제·산업재해 처리 등 합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부친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해 임신부인 딸이 1인 시위 나선 것이 언론에 보도 (7월 11일자 광주일보 6면)되자 건설사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에 깔려 숨진 고 마체진씨의 유족은 사고 한달여만인 17일 건설사에서 사과문 초안을 전달받았다.

유족인 두 딸은 이달 10일부터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건설회사 앞에서 건설사의 수사 적극 협조 등

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건설사는 유족측과 14일 면담을 진행한 뒤 사과문을 전달하고 추모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

건설사는 민사적으로는 실무진과 산업재해 처리를 하고, 형사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측에서 작성한 사과문은 유가족 측 검토를 거쳐 보도자료 형식으로 17일 오전 배포될 예정이다. 추모제는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열린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립예술단,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 소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노조)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5월 광주시의 단원 외부 공연 불허 방침과 관련해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광주시가 단원들의 외부공연을 불허하고

특한 광주시립예술단 북무규정 6호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에 규정하는 예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반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광주시립예술단 북무규정에는 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이외 다른 공연에 출연할 수 없지만,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요청으로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예술단원들은 승인을 받는 경우 사례금 내역을 보고하라는 것을 두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광주시 인권윤부즈맨에 신고했다. 인권윤부즈맨은 광주시에 "외부공연을 승인할 때 사례금 내역을 보고받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1일 열린 명인명장명무전 '신명' 공연에 시립창극단원 5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승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